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촉구 성명서

기지촌 여성문제는 한국 현대사 문제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처리의 하나로 한반도 남쪽에 진주하여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은 현재 고령의 노인으로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으며 심리적·경제적 결핍상태에서 살고 있다.

한국 경제와 안보의 역군으로서의 기지촌 여성

한국 정부는 이들을 한 때 ‘산업역군’이자 ‘민간외교관’으로 명명한 바 있으며, 이들은 소위 ‘애국자’로 부르기도 했다.

실제 기지촌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한 바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8군 정보에 따르면 기지촌 매매춘이 1960년대 남한 GNP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7년에는 10억 달러로 GNP의 1%를 차지하였고, 1992년 경기도 송탄의 경우 매매춘 관련 사업이 송탄경제의 60%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보 측면에서는 기지촌은 1950년 한국전쟁 이래 한국 정부가 반공주의·국가안보와 더불어 군사안보를 최우선시하면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존속되었다. 기지촌 평화사업은, 1969년에 발표된 Nixon Doctrine에 의해 주한미군이 철수(7사단, 2만명)하면서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해 민군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기지촌 여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입을 적극 요구한 것이었다. 당시 정권은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 설치와 미군 기지촌에 대한 ‘정화정책’을 공식화할 것을 명령하였고, 기지촌 여성을 ‘민간외교관’으로 추켜세우면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다. 미국 측은 합동위원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활동하였는데, 한국정부의 승인과 함께 합동위원회는 1971년 9월 2일, 민군관계에 관한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지촌 관련 문제 조사와 분석, 권고안 마련 등을 위임하는 등 한국 정부와 합동으로 기지촌정화에 참여하였다. 한국정부는 1971-1972년에 기지촌의 보건과 위생을 개선하는 데 총 3억 8천만원을 할당하고, 성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2억 24,00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기지촌 여성의 몸과 행동에 대한 한미합동 관리는 기지촌 여성들을 외교정책의 도구, 즉 한미 민군관계 개선 책임을 진 ‘민간외교관’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기지촌 여성의 인권

기지촌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할머니들은 한반도 분단사와 한국현대사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존재이며, 역사의 산증인이다. 이들은 파괴·가난·전쟁의 살육·전쟁으로 인한 가족과의 분리를 보여주고, 남북한의 지리적·정치적 분단과 남한 군대의 주한미군에 대한 끊임없는 종속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인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성매매자로서의 삶을 살았거나 도덕적 자질이 부족해서 이 길

로 들어선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한미양국에 의해 양국의 안보이해 증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이들 여성에 대한 국가의 억압과 착취를 의미한다.

한때는 산업역군이자 민간외교관으로서 한미친선에 대리역할을 해 온 기지촌 여성들이 노인이 된 오늘날 여전히 한국사회의 냉대와 경멸, 소외 속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기반이 없고,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혜택 등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로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연관된다.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

경기도는 한국 전쟁이래 가장 중요한 안보지역으로 등장하였으며, 따라서 34개의 중요 미군 기지가 의정부, 동두천, 평택 등에 분포(173평방 킬로미터, 5200만평)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대로 경기도 경제는 기지촌에서 흘러나오는 달러를 기반 해 성장해 왔고,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가족이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기도 기지촌 주변에 남아 어렵게 살고 계신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의 노후를 돌보아야 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을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의 경우, 기지촌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정리 일대가 뉴타운으로 개발되면서 방세가 인상되어 정부보조금 등으로 월세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월세가 상승하면서 점차 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계획으로 인해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18조 8천억, 기지이전에 13조 등 총 31조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촌 여성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단 한 평 편하게 누울 공간마저 없다면 과거 이들을 산업역군, 민간외교관으로 추켜세웠던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된다.

기지촌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MBC 이체는 말할 수 있다, '기지촌 역사(2003. 2. 9),' MBC PD 수첩, '기지촌 할머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2009. 6),' 한겨레 21, '국가가 포주였다(2008. 1. 29),'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기지촌 할머니, 누가 그들에게 낙인을 찍었나(2006. 10. 21), KBS 2TV 시사 투나잇, '기지촌 여성(2006. 5. 4),')

그리고 그동안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던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4월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차단당한 채 기지촌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민인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들 기지촌 여성들은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기지촌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기도는 국회법률 제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는 경기도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단체들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4월 임시회 회기 내에 기지촌여성 지원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3월 24일

경기여성연대 ·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의정부두레방, 평택햇살사회복지센터, 광주 씨알여성회, 파주에코젠더,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안성호박넝쿨, 포천가족성장상담센터, 광주여성연대, 부천여성정책포럼(주)한소리회, 쉬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미군문제소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경 기 여 성 연 대

취재협조요청서 [1매]

문의 이정희 | 010-9958-9603 | ggwnet@hanmail.net

경기도 기지촌여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지원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1. 지역 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포함합니다.
2. 경기여성연대는 1997년 발족하여 모든 여성들의 인권, 지위향상 및 여성정치참여 등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이며, 공동주최로 함께 하는 기지촌 여성인권연대는 기지촌여성들의 인권회복을 주목적으로 2012년 8월 발족 하였습니다.
그 동안 국제적인 성매매 공간이자 결혼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재의 기지촌 문제를 공론화 해 왔으며, 궁극적으로 인종·성별·계급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고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에는 34개의 중요 미군기지가 의정부, 동두천, 평택 등에 분포(173평방 킬로미터, 5200만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경기도 기지촌여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지원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나. 일 시 : 2014년 3월 24일 (월) 오전 11시

다. 장 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다. 공동주최 : 경기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라. 순 서

- 대표 인사말 (경기여성연대상임대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 경과보고
-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방향
- 질의응답

경기여성연대 ·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씨알여성회, 에코젠더,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광주여성연대, 부천여성정책포럼(준),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호박넝쿨, 두레방, 햇살사회복지센터, 한소리회, 쉬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회 미군문제소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